

정치중립 ‘국가교육위’ 대선공약 제안

시·도교육감들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 과제’ 9개 발표… ‘교육부 개혁·교육자치 실현’에 포함돼

17개 시·도교육감들이 6일 교육부 폐지를 염두에 둔 ‘국가교육위원회’(가칭) 설치를 각 당 대선주자들에게 교육공약으로 공식 제안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 과제’ 9개를 발표했다.

9개 과제 중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자치 실현 공약에 포함됐다.

교육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정부 주도의 획일적 교육정책은 자율과 다양성의 시대적 가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교육부의 권한과 체계를 과감하게 축소하여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감에게 완전 이양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권한과 체제 축소 방향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권한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 대학교육은 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에 맡기고 국가 교육의제 설정 및 교육개혁 추진 등에 대해서도 현재 교육부가 아닌 정치 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에 맡기자는 게 시·도교육감들의 생각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시·도교육감 전체 이름으로 협의의 차원에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가장 핵심은 유·초·중등 교육권리는 시·도교육감들에게 넘기려는 것”과 “국가교육과정 설계는 현재 교육부가 아닌 새로 만들어질 국가교육위원

회에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은 17개 시·도교육청 연구원과 전문가 등 21명이 지난달 12일부터 3일간 진행한 ‘교육정책 및 방향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3%포인트)를 토대로 나왔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 조사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 분담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37.3%가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아닌 정치적 중립기구에서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31.4%는 ‘교육부는 대학을, 교육청은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자’고 했다.

반면 ‘교육부 권한을 강화하자’는 응답자(12.8%)와 ‘현행 체제를 유지하자’는 응답자(9.3%)는 10명 중 2명에 그쳤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부가 행정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적 염원과 국가적 계획, 미래 사회를 지향한다면 폭넓은 정책을 다루고 심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 형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있어 왔다”며 “교육부를 폐지한다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등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시·도교육감들은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의 안전한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자유발행제도의 교과서 제도 개편 ▲교원 보강 ▲학교 민주화 정착 등을 차기 대선주자들의 공약으로 제시했다. /뉴스

특검 “추가 확보 안종범 수첩 39권 폐기 지시…보좌관이 허서 보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추가 증거로 확보한 안종범(57·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이 지금까지 청와대에 보관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6일 “안 전 수석이 폐기하라고 건넨 수첩을 보좌관이 청와대 내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다 안 전 수석과 관계 없이 변호사 입회 하에 임의제출해 압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확보된 수첩에는 안 전 수석이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의 업무 기록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 본부가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 17권과는 별개의 것이다.

특검팀이 새로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독대 부분에 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특검팀은 ‘문화융성·스포츠 분야 지원’을 비롯,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메모 등 관련 수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



‘다 고발할 수 있을까?’ 고영태 전 더불어민주당 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제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영태 “최순실, 2012년 말 안봉근 만났다” 증언

18대 대통령 선거 무렵으로… ‘모르쇠’로 일관한 안 전 비서관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

고영태(41)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무렵 최순실(61)씨와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만났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는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모른다고 한 것으로 알려진 안 전 비서관의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운)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 전 수석의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씨는 “최씨는 2012년 말경 청담동 카페에서 안 전 비서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최씨를) 정문희씨의 부인이라고만 알

았다”고 진술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의문 시절부터 오랜 기간 보좌해왔기 때문에 최씨의 존재나 국정 개입과 관련해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샀다.

특히 최씨가 박 대통령 순방일정을 미리 알았고 의상을 제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에 제2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해 안 전 비서관이 최씨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안 전 비서관에 대해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조사를 마쳤다.

최씨도 지난달 16일 한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 전 비서관과 정

호성 전 비서관을 매주 일요일 관저에서 만났느냐’는 질문에 “관저에서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갈 시간도 없었다”며 “의국 나가있었기 때문에 허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 처음 알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고리 3인방” 중 안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현재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당초 지난달 5일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불출석했고 이후 ‘폐문부채(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14일로 예정돼 있다. /뉴스

이춘석, 개성공단 해법 모색 토론회 주최

“피해 지원 특별법 통과·공단 재가동 절실”

이춘석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이하 남북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6일 오전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개성공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보상 특별법 통과와 공단 재가동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대처를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춘석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전면적인 공단 폐쇄 이후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업체와 근로자들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업체 및 근로자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보상 특별법을 통과시켜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제4차 북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격 중단시켰으나, 1년이 지난 지

금까지도 근거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피해보상과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2016년 7월 국회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하였으나 정부의 반대로 현재 계류 중이다.

이 위원장은 이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안정적인 대북 위기 관리라는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도 개성공단 재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북경협은 상징이자 향후 한반도 통일의 교두보가 될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년을 맞아 개성공단 재가동과 피해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이춘석 남북특위위원장 외에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김경협·정안석·이태규

국회의원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개성공단입주기업 대표 및 임직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남북관계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해 개성공단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촉구했다. /익산=장원영 기자

김기춘, 현재 불출석 사유서 제출

오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예정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관계자는 6일 ‘내일(7일) 출석 예정인 김 전 실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증인신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만 수일간 안정을 취한 이후 다시 현재의 증인 출석 요구가 있으면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최순실 ‘보스’·안종범 ‘선생’

차은택씨와 미르재단 직원들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씨를 ‘보스’로 불렀고, 최씨는 차관급인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선생’으로 호칭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앞서 최씨 재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은 최씨를 모두 ‘회장님’으로 불렀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보스라는 호칭을 썼다는 증언은 이번에 처음 나왔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운)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 전 수석의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성환(45)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최씨를 주로 ‘보스’ 또는 ‘회장’이라고 불렀다”고 밝혔다.

이 전 사무총장은 “저는 최씨를 회장이라고 불렀다”며 “차 전 단장이 보스라고 해서 보스라고도 표현했다”고 전했다.

최씨를 ‘보스’로 안 전 수석을 ‘안 선생’이라고 지칭한 것은 이 전 사무총장이 안 전 수석에게 보낸 문자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검찰이 공개한 이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안 전 수석에게 보낸 문자에는 ‘명하신대로 대의 위해 사무총장 직서 이동’, ‘안 선생님(안 전 수석 지칭)께서는 너무 잘된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보스(최씨 지칭)께서 7월초에 보자고 얘기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청와대 경제수석을 안 선생이라고 지칭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이 전 사무총장은 “안 선생이라는 표현은 (최씨 등과) 카페 테스타로사 등에서 회의할 때 여러차례 쓰인 걸로 기억한다”며 “최씨가 안 선생님이란 표현을 써서 그리 썼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어 “안 전 수석에게 보낸 문자에 ‘보스’란 표현이 있는 걸 보면 안 전 수석도 당시 최씨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술자리 어느지 모르는지 궁금했다”며 “회의에 나온 단어들을 써서 문자를 보냈다. 피드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뉴스

이성환 “최순실이 미르재단 실질 운영”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미르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운)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성환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항상 최종 결정은 최순실씨를 통해서 한 걸로 인지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최씨는 차은택씨가 미르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는데, 미르재단은 최씨가 실제 운영한 것이냐”고 묻자 이 전 총장은 “아니다. 최씨가 운영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이 전 총장은 “차은택씨는 미르와 관련해 자신과 ‘회장님’(최순실씨)한테 연락할 때는 차명폰을 쓸 것을 요청했다”며 “차씨의 요구로 차명폰을 만들게 됐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김성현(44)씨와 이한선(38) 전 삼일시사가 법정에 출석해 최씨는 설립 과정에서 임원 등을 추천한 사실이 있고, 설립·사업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최씨가 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총장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이 전 총장은 이어 “(자신의) 결재 없이 플레이그라운드(최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광고회사)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지급됐다”며 최씨가 미르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생각하는 근거로 꼽았다.

이 전 총장은 “미르재단 임원들이 재단 업무를 설명하면 최씨가 큰 방향을 제시하고 지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며 “카페 테스타로사”에서 미르재단 관련 회의가 끝나고 최씨가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 이한선씨와 김성현씨가 밤을 새워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테스타로사에서 포스트잇에 지시사항을 적어 참석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했다”며 “구체적인 업무 지시 일부를 이한선씨에게, 대부분은 김성현씨에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전 총장 진술은 차은택씨와 고영태(41)씨 주도로 미르재단 설립과 운영이 이뤄졌다는 최씨 주장과 부합한다.

검찰은 재단법인 미르의 대역이자 계산내역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이 “전경련이 미르재단에 사무실 임차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1억9300만원을 빌려준 게 맞냐”고 묻자 이 전 총장은 “그렇다. 1억3900만원은 제가 추진했다”고 답했다.

“미르재단이 청와대가 주도한 게 아니라면 전경련에서 1억 9300만원의 거액의 임대차 보증금을 빌려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검찰의 질문에 이 전 총장은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만,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뉴스

특검 “수사기한 연장 신청 검토 중… 수사 부족”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달 28일로 끝나는 수사기한에 대해 연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수사 기한 연장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14가지 수사 상황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기한 연장 승인 여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한다. /뉴스